

■ 미 캘리포니아 주,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기후·환경 정책 유지 방안 모색

○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대비하여 해당 주 만의 강력한 기후 및 환경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.¹⁾

- ※ 미국 환경보호청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, EPA)은 ‘청정대기법(1970 Clean Air Act)’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규정보다 강력한 오염 통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-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연방 정부의 주요 기후 규정을 약화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에 부여된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(waiver)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함.
-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70건 이상의 기후·환경 소송을 제기했으며, 그 중 50%가 승소한 바 있음.
 -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동안 대법관 3인 등 200명 이상의 연방 판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향후 그 같은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.
-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동 주의 환경 규정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분명히 하였음.
 - Rob Bonta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민주당 인사들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(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)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.
-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과의 합의를 위한 소송, 주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신규 규정 수립 및 법률 제정, 주정부의 조달 정책 등이 있으며, 새로운 연방정부가 적용 제외권을 박탈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규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
 - 1998년, 캘리포니아 주는 46개 주와 함께 담배기업으로부터 2,060억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있으며, 금년 9월에는 소비자에게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ExxonMobi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.
 -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를 활용한 조달 정책 역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, GM 등 일부 기업은 배기가스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으나, 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소속 차량 구매 시 해당 기업 제품을 제외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음.
 - 그 외 현재 검토 중인 다른 조치로는 휘발유 차량 이용 및 구매 시 벌금 부과 및 해당 벌금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활용, 경유 트럭 이용이 집중되는 대형 창고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이 있음.
- 캘리포니아 주는 미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기후·환경 정책을 추진해왔으며, 그 영향력도 상당함.
 -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신규 트럭의 75%를 무배출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, 2035년 이후부터 신규 휘발유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임.

1) New York Times, 2024.10.12.

- 미국 내 16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승용차 규정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며, 10개 주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트럭 규정을 도입해, 캘리포니아 주의 규정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%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.
- 또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기업에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고, 지역 내 석유·가스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도 강화하였음.
- 오는 11월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“기후채권(climate bond)” 발행을 결정하는 투표도 예정되어 있으며, 이는 기후·환경 프로젝트 비용을 감당하는 데 투입될 것임.
-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는 세계 4위로, 동 주의 환경·기후 정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,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후 외교 관계를 통해 다른 국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.
- 중국과 EU는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자동차 규정의 일부를 그대로 도입하였음.
-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프로그램을 수립한 ‘국제탄소대응파트너십(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)’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, 해당 파트너십에는 캐나다 퀘벡 주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.